

IJS JAPAN REVIEW



재난/재해의 인도적 지원으로 보는
한일관계 뇌피셜

박삼헌 | 건국대 일어교육과 교수

재난/재해의 인도적 지원으로 보는 한일관계 뇌피셜

들어가며

2024년 1월 1일 오후 4시 10분, 일본 혼슈(本州) 중부 이시카와현(石川県) 노토반도(能登半島)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10일 현재,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도 약 2만 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1일 한국 정부는 일본에 300만 달러(약 39억 6,000만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¹⁾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이 지원은 일한의 우호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환영과 함께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²⁾

여기에서 필자의 눈에 들어온 부분은, 일본에서 대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한의 우호협력관계’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일한의 우호협력관계’라는 논평은 그저 ‘외교적 언설’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외교적 언설이기에 2024년 1월 현재,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우호협력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2016년 구마모토(熊本) 대지진 때에는 한국 정부가 약 10만 달러(약 1억 1,435만 원) 상당의 구호물을 지원했던 것에 비한다면, 30배나 증가한 이번의 인도적 지원은 분명히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하게 한다. 참고로 구마모토 대지진 때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일이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다”³⁾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논평을 냈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재난/재해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그때그때의 한일관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barometer)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에 대한 필자의 ‘뇌피셜’을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다.

1) 「정부, ‘노토반도 강진’ 일본에 40억 원 상당 인도적 지원」, 『JTBC news』 2024.1.11.

2) 「韓国, 300万ドル規模支援」, 『朝日新聞』 2024.1.12.

2) 「한국 ‘연쇄지진’ 구마모토에 10만불 구호품…日 “감사드린다”(종합)」, 『연합뉴스』 2016.4.22.

1976년 대한적십자사, 일본의 태풍피해 지원

『대한적십자사 80년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 세계의 어느 구석에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든 인류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에서 국제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구호 규모는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25전쟁 이래 줄곧 각국 적십자사의 도움만 받아오고 있던 한적(韓赤)이 이제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원조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한적(韓赤)이 벌였던 국제구호활동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 6월 5일에 필리핀 국민의 태풍피해 복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미화(美貨) 1천 달러를 송금했고, 7월 29일에는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복구비로 역시 1천 달러를 송금했다. 9월 21일에는 일본이 태풍피해를 당하자 2천 달러를 송금했고 (중략) 1970년대 후반기에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인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국제구호활동에의 참여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⁴⁾

1976년 9월 21일 대한적십자사는 태풍 17호로 피해 입은 일본에 2천 달러를 지원했다. 이것은 ‘도움만 받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적인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국제구호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에 지원한 첫 번째 사례이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충분히 ‘선전’할 만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 ‘사실’이 기사화되지 않았다. 일본의 언론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18)과 김대중·김지하 재판 관련 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⁵⁾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금을 발표하지 않았거나, 발표했지만 언론이 기사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필자는 전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당시 피해 예상이 7500억 엔⁶⁾에 달했던 일본에게 한국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 2천 달러(당시 약 586,000엔, 약 968,000원)⁷⁾는 관심 밖의 사안이었던 듯싶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그다지 티도 안 나는 지원금을 일본에 지원했을까. 그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추측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김대중 납치 사건(1973.8.8.) 이후 삐걱거리던 한일관계가 1975년 7월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외무상이 김대중 사건의 종결과 ‘일한관계의 정상화’⁸⁾를 선언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종결짓고 한국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 성의 표시는 아니었을까. 다만 그 성의 표시를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4) 『대한적십자사 80년사』, 대한적십자사, 1987, 104쪽.

5) 「板門店, 分割警備発効 板門店分割警備問題」, 『朝日新聞』 1976.9.16.; 「金大中氏へ医師団派遣 政府が拒否」, 『朝日新聞』 1976.9.23.

6) 「17号の被害は七千五百億円 台風17号豪雨禍」, 『朝日新聞』 1976.9.30.

7) 1976년 5월에 설령탕 한 그릇이 450원이었으므로, 약 2,151인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8) 「日韓関係は正常化」 宮沢外相 朴大統領へ表明, 『朝日新聞』 1975.7.24.

1995년 한국 정부, 일본의 지진피해 지원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阪神)·아와지(淡路) 대지진의 사망자는 6,434명으로, 전후 일본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해였다.

당시 자이니치(在日)가 다수 거주하는 고베 나가타구(長田区),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区) 등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진피해 일(日) 교민 구호 50만 불 조속 지원”⁹⁾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日) 교민’, 즉 재외국민에 대한 피해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일본에 “18만 달러 상당의 1차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2차로 5백만 달러 규모의 구호품을 추가 지원”¹⁰⁾했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지진 등 일본 재난에 구호물품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¹¹⁾이었다. 또한 얼마 후 2월 5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의 모금과 의료 복지사업 등을 담당”하기 위해 발족하기로 결정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기금(가칭)’의 목표 조성금이 10억 엔(당시 약 1,060만 달러)이었음을 감안한다면,¹²⁾ 당시의 한국 경제 성장을 고려한다 해도 1·2차 총 518만 달러 규모의 구호품 지원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파격적 지원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이렇듯 처음으로, 게다가 파격적으로 일본에 인도적 지원을 했을까. 1995년은 해방/패전 50년, 한일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더군다나 이 해부터는 “중군 위안부 보상 및 사할린 교포 송환 문제 협상”이 가시화될 전망이었던 만큼, 이 인도적 지원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국력만큼 대접받겠다”¹³⁾고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다운 ‘통 큰’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 한국, 독일, 캐나다, 요르단 각국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대하여 한신대지진에 대한 각국의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했을 뿐이었다.¹⁴⁾ 김영삼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통 큰’ 지원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을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후로도 “한국병합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 실시됐다”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발언(10.5), “식민지 시대 한국에 좋은 일했다”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처 장관의 발언(10.11)이 이어지자, 마침내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당당한 도덕성에 입각해 그런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¹⁵⁾는, 뒤끝 작열하는 저 유명한 ‘버르장머리’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9) 「지진피해 日교민 구호 50만弗 조속 지원키로」, 『조선일보』 1995.1.21.

10) 「5백만 달러 규모 日지진 추가지원 정부, 입장 전달」, 『조선일보』 1995.1.25.

11) 「우리나라, 일본에 구호품 긴급 지원」, 『KBS 9시뉴스』 1995.1.21.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韓國の全経連 義援金100万ドル提供を申し出」, 『朝日新聞』 1995.1.20).

12) 「10億 엔 일시 지급키로」, 『동아일보』 1995.2.6.

13) 「「國力만큼 대접받겠다/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 『경향신문』 1995.1.7.

14) 「支援各国に謝意 外相、大使ら招き」, 『朝日新聞』 1995.1.26. ; 「지진 위로-구호물품 日외무 “한국에 감사”」, 『조선일보』 1995.1.27.

15) 「韓·中정상 日망언 비판」, 『조선일보』 11.15. 일본에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日本の悪い癖改める”라고 번역되었다(「日本の悪い癖改める」 韓国大統領発言に官房長官が不快感, 『朝日新聞』 1995.11.17).

이 같은 필자의 뇌피셜을 가능하게 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다. 당시 일본의 지진피해 지원과 관련한 도쿄 특파원 ‘기자의 눈’이라는 기사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피해 주민들의 질서 의식과 협동 정신은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모습의 뒤편에 아쉬움과 미진함이 남는다.

우선은 외국의 지원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다. 지금까지 일(日) 정부에 구호물자 및 인원 파견을 제안한 나라는 52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일(日) 정부는 이 가운데 선진 12개국의 도움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나마도 당초에는 “피해현지의 수요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였다가 “외국의 성의를 무시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주말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日) 정부는 한국의 구호물자는 먼저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국내 언론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일(日)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 자세의 밑바닥에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지원을 받을 수야...’라는 식의 자존심이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중략) 고베에서 만난 한 재일교포는 “남의 땅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서러운 것”이라며 “언론을 비롯한 사회 분위기에서 ‘우리’ 집단이 아닌 남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중군위안부 배상문제나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결국 남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그의 얘기였다. 이 같은 모습들이 혹시라도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본은 아직도 ‘경제만의 대국’ 이상은 아니라는 느낌이다.¹⁶⁾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개도국’이라는 자의식이 존재하는 한편, 한국(인)과 달리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만의 대국 이상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그 한국(인)의 자의식을 극복하는 방식이 드러나 있다. 아마도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시쳇말로 애써 생각하여 주고도 뭔가 손해 본 듯한 짹짹함, 요즘 말로 하면 ‘의문의 1패’였던 것은 아닐까.

2011년, 반일 시민운동 단체도 일본의 지진피해 지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로 그 피해가 현재진행형인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20여 개국으로부터 약 1,000명의 구조대가 파견되었다.

그중 주일 미군은 일본 자위대의 협력 하에 병력 약 2만 명, 함선 19척, 항공기 140기를 동원하여 지진피해지 지원활동, 이른바 ‘친구(トモダチ) 작전’¹⁷⁾을 펼쳤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의 ‘사상 최대 공동작전’이 펼쳐진 이유는, 미국이 당시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로 경색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동일본대지진 지원을 계기로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요청이 있다면 주일 미군 5만 명 전원을 동원하겠다”¹⁸⁾는 주일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16) 「[기자의 눈] 地震피해 日本의 두 얼굴(이동관/도쿄)」, 『동아일보』 1995.1.27.

17) 「〈海外救援隊と日本〉日米‘史上最大’の支援作戦」, 『朝日新聞』 2011.4.3.

18) 「〈海外救援隊と日本〉国境を越えた救援の意味」, 『朝日新聞』 2011.4.3.

한국도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대 102명을 태운 C-130 수송기 3대를 파견했다.¹⁹⁾ 한국이 인적 지원 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소식을 전하는 14일 자 『조선일보』 16면은 “3·11 일본 대재앙”이라는 전면 특집기사인데, <“이제 우리가 일본을 도울 때” ... 한류 스타도 팔 걷는다>, <反日 시민운동 단체도 “이웃의 아픔 함께해야”>, <네티즌들 “힘내라 일본”> <각계각층 모금운동 나서>, <“日 돕자” 12개 단체·병원 뭉쳤다>, <류시원 “피해자들 위해 기부할 것” 배용준·이병헌도 “도울 방안 모색”> 등의 표제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일본은 우리와 울타리를 마주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규모 구호 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통해 일본 국민 돕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1만 2,681명, 13억 3,914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²⁰⁾ “코흘리개 어린이부터 네티즌, 남대문 상인, 은행원, 회사원, 공무원, 80대 할아버지까지 일본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사가 벌이는 “일본을 도읍시다” 캠페인 사흘째인 16일에는 “15만 167명이 10억 2,311만 원을 모아 지금까지 20만 4,108명이 모두 30억 5,038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한국인도 놀란 ‘한국인의 온정’”이라 평가한다.²¹⁾ 이런 의미에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의 지진피해에 대한 한국(인)의 인도적 지원 중 그 규모로도 금액으로도 역대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기에 참고가 되는, 『조선일보』 3월 17일 자 사설이 있다.

1억 3,000만 일본 국민이 일본 동부를 덮친 진도 9.0의 대지진과 뒤따른 대해일(海溢), 그리고 원전 폭발사고가 겹치면서 방사능 오염의 공포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지겠다는 행렬에 종교 단체, 기업, 한류(韓流) 스타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동참하고 있다. 보편적인 인류애(人類愛)로 보나 이웃 나라의 도리로 보나 당연한 일이다. (중략) 우리는 지금 G20 공동 회원국으로서 일본과 머리를 맞댈 정도로 성장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는 한·일 관계 역시 피해자·가해자라는 과거의 도식을 벗어나 더 성숙한 협력적 파트너로 업그레이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일본 국민을 도울 파격적 발상의 지원책을 짜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댈 때다.²²⁾

여기에서는 동일본대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야말로, ‘G20 공동 회원국으로서 일본과 머리를 맞댈 정도로 성장’한, 그렇기에 ‘한일관계 역시 피해자·가해자라는 과거의 도식을 벗어나 더 성숙한 협력적 파트너로 업그레이드’된 한국(인)의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인)이 많이 힘든 만큼, 그러한 일본을 ‘진심’으로 도와주면, 그 일본(인)도 ‘역시 피해자·가해자라는 과거의 도식을 벗어나 더 성숙한 협력적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19) 「韓 “긴급구조대 102명 파견”」, 『조선일보』 2011.3.14.

20) 「[일본을 도읍시다] 1만 2681명 하루만에 13억 3914만원...日돕기 온정 넘쳤다」, 『조선일보』 2011.3.15.

21) 「[일본을 도읍시다] 어제 하루만 15만 명 성금...한국인도 놀란 ‘한국인의 온정’」, 『조선일보』 2011.3.17.

22) 「[사설] 1억 3000만 일본 국민 돕는 파격적 發想의 지원을」, 『조선일보』 2011.3.17.

이리라. 하지만 같은 달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아이디 ‘원조 smile’은 “일본은 이제 우리의 이웃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침탈 행위를 일삼는 해적 국가이며 위해(危害) 국가”²³⁾라고 발언하는 등 ‘뒤통수 맞은’ 배신감을 토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 대해 그 어느 때에도 없었던 ‘대등의식’에 기반한, 그렇기에 ‘한국인도 놀랐던 한국인의 온정’도 결국 지난 과거 일본의 재난/재해 피해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한국(인)의 ‘의문의 1패’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반일’ 정서,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일본인의 ‘혐한’ 정서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에서는 2월 23일 『만화 혐한류』가 문고판으로 재출간되면서 ‘혐한’의 대중화가 가속화되었다. 8월 30일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의한 한국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4년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합의의 먼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국민 정서’ 중 하나였던 ‘반일’ 정서의 고착에 일조를 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한국(인)의 인도적 지원은 2024년 현재에도 이어지는 한국(인)의 ‘반일’과 일본(인)의 ‘혐한’의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상 재난/재해의 ‘인도적’ 지원으로 보는 한일관계 ‘뇌피셜’이었습니다.

23) 「[日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日, 한국에 발길질… 이웃 아닌 해적” 시민·단체들 비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이순신 프로젝트’ 착수」, 『조선일보』 2011.3.31.



박삼헌
건국대 일어교육과 교수

<IJS일본리뷰>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재)학봉장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